

청년실업과 외국인 노동자 미래전망  
의 정 토 론 회

## 주제 발표 3

### 충남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분석과 시사점

신 동 호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 제1장. 서 론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력정책은 국가단위 외국인 노동시장 관점에서 추진되며, 이로 인해 지역단위 연구 및 관련정책은 부재한 실정

○ 기존 외국인력 정책의 주된 이슈 및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력 노동시장(수요와 공급)구조 측면
- 외국인력 경제적 효과 측면
- 해외 외국인력 정책 및 제도 측면
-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사회·경제문제(내국인력 대체 및 불법체류 등) 측면
- 권익보호(인권 및 복지) 측면 등

■ 정부주도의 외국인력정책이 지역에 투영과정에서 '정책의 사각지대'발생 및 국가단위 정책이슈가 지역단위에서 보완되어야 필요성 증대

○ 기존 외국인력 정책영역은 고용허가제를 토대로 국가단위의 외국인 노동시장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온 탓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양상

- 실제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외국인력 수급은 일원화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루어지며, 유입된 인력의 관리 역시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짐
- 이로 인해, 지역단위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나 제한적 범위 내 근로여건 개선 등에 머무르는 수준임

○ 그러나 외국인력의 유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지역노동시장의 주요 정책이슈로 점차 대두되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시장에 대한 지역단위의 기초적인 실태규명이나 관련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 따라서 도내 외국인력의 고용실태를 공급과 수요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 1) 연구범위

#### (1)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에서는 도내 외국인력의 고용실태에 주안점을 두어 내용적 범위를 설정함.
-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 외 외국인력에 대한 도내 사업장의 고용수요, 채용 경로, 고용관리, 근로조건, 채용수준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외국인 취업특성(취업자, 실업자, 고용률, 임금수준, 산업·직업별 취업규모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아울러 기존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마련을 위해 국내외 관련 정책 및 법·제도 등을 검토하고자 함

#### (2) 외국인력 범위

-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이 이에 해당함
- 이 중 E-1~E-7까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전문기술 외국인력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취업이 가능하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은 비전문 외국인력에 해당함
- 한편, E-9과 H-2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 취업이 가능한 취업사증으로 E-9은 15개 저개발 국가의 순수 외국인(단순노무자)에 해당하며, H-2는 중국 및 러시아 동포로 국한됨
- 본 연구에서는 자료구득 및 설문조사 등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력의 범위로 일반고용허가자와 특례고용허가자로 한정함<sup>1)</sup>

1) 일반고용허가자란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구직자명부 등록자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칭하며, 특례고용허가자란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 후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칭함

[표 1-1]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종류

구 분	유 형
체류자격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은 비취업비자이나 취업가능함

[표 1-2] 취업비자에 따른 외국인력 구분

구 분	유 형
전문인력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인력	비전문 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3. 연구방법 및 분석틀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실태조사, 그리고 설문조사 등을 수행함

[표 1-3] 연구방법 개요

구 분	조 사 개 요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IS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통계청)</li> <li>- 2015년 지역 및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법무부)</li> <li>- 2015년 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행안부)</li> </ul> </li> </ul>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외국인력정책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급주도적 제도(supply driven system), 수요주도적 제도(demand driven system)의 시행사례</li> <li>- 대상국가 :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UAE, 카타르</li> </ul> </li> </ul>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 외국인 고용 사업장</li> <li>• 조사일정 : 2017.8~9월</li> <li>• 조사지역 : 충남도 전역(천안·아산 중심으로 표본설정)</li> <li>• 조사대상 : 도내 제조업체 208개소</li> <li>• 조사내용 : 인력수요, 채용환경, 고용관리, 기존 정책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li> </ul>

## ■ 연구흐름 및 분석틀



## 제2장. 국내외 외국인력 정책동향

### 1. 해외 외국인력 정책 동향<sup>2)</sup>

#### 1) 유학생 정책

- 유학생정책으로 중동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 UAE와 카타르를 제외한 주요국들은 유학생 유치에 학비, 기숙사, 체제비 등을 지원하는 국비 유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미국과 호주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공립학교 입학, 동반비자 발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
  - 또한 미국은 유학생에게 별도의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하고, 호주는 유학기간 중에도 주당 20시간(방학에는 풀타임)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일본의 경우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일정기간의 체류를 허용하지만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혜택은 부족함
- UAE와 카타르는 GCC내 학생교류나 외국 유명대학 유치를 통해 우수 외국인재를 간접적으로 유치함

#### 2) 우수인력정책

- 우수인력정책으로 개별기업 차원에서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UAE와 카타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우수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호주, 일본은 포인트제도를 통해 입국 시부터 우수인력을 선별하여 이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함
  - 미국은 포인트제도와 유사한 다중 우선순위제도를 통해 순위에 따라 쿼터 차등적용함
  - 포인트 제도는 연령, 학력, 자격증 등으로 매겨진 점수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높은 등급에게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채택하고 있음.

---

2) 해외 외국인력 정책동향은 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을 발췌·인용하였음을 밝혀둠

- 개방적 이민정책을 가진 미국, 호주뿐만 아니라 외국인력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포인트 제도를 시행함('12.5)
- 독일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비EU국가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EU블루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자국 내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 동 제도는 EU국가간 자유로운 이동과 취업 외에 제3국(역외국) 우수인력의 EU 역내 진입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임(연봉, 경력 등 우수인력 자격요건 있음)
-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 가족의 동반입국과 취업을 허용하며, 미국과 프랑스는 출입국시 전용창구 등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3) 미숙련 인력정책

- 미숙련인력정책으로 주요 7개국 모두 고용허가제나 노동허가제를 통해 미숙련인력의 취업직종과 쿼터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 부족한 노동력을 미숙련 외국인력의 단기활용을 통해 충당했던 UAE와 카타르도 최근 내국민 고용을 일정부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는 내국민 고용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동시장테스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미국은 고용부담금, 독일은 고용허가수수료, 프랑스는 외국인 고용세를 징수하여 외국인력에 대한 초과수요를 방지하고 있음

### 4) 사회통합사업

- 사회통합사업으로 일본과 중동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언어, 기본소양, 역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차별금지법으로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인종, 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행위로부터 외국인력을 보호하고 있음
- 일본, UAE, 카타르의 경우 차별금지법은 없지만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외국인력에게 자국의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다문화방송을 위해 호주는 공영방송으로 정부가 다문화방송을 운영하나 다른 나라들은 이주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주민의 모국어로 제작되어 정보 제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송임



## 2. 정책적 시사점

- 첫째,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도개선을 통해 날로 치열해지는 국가간 전문인력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여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
  -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격, 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맞춤형 인재의 유입을 고려해야함
  -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출입국 시 서류 간소화, 별도창구 마련 등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의 국내 취업절차를 손쉽게 하는 등 가족과 동반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장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유학생의 절대 비중을 늘리고 졸업 후 국내 취업의 적극 지원을 고려해야 함
- 둘째,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업 분야에 필요한 수의 미숙련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 마련해야함
  - 산업 분야별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적정 도입규모를 도출
  - 내국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용공고 등 내국인 고용노력을 제도화한 노동시장테스트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함
  -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통해 내·외국인 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책 강화해야함
  - 다양성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언어·직업 교육의 실시를 고려 해야함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력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하고 내·외국인간 소통을 제고하기 위한 Ethnic Media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1] 해외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비교

구분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UAE	카타르
인력정책 전반	"적극적인 전문인력 유치와 체계적인 미숙련인력 관리(유입억제)" 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도모						
전문인력	유학생	-Endravour Scholarship Program에서 연간 약 3천명 유치 -저렴한 의료보험, 장학금 등 제공	-아대워 프로그램들 통해 연간 약 6천명 유치 -장학금 지급과 기숙사 입주보장	-Campus France (Agency)를 통해 연간 약 만명 유치 -생활비, 기숙사, 등록금, 비자발급 비용 지원	-JASSO(독립행정 법인)에서 연간 4~6천명 유치 -장학금, 항공료, 수험비 지원	-미시간대 등 외국 유명대학 유치	-GCC 국가간 학생 교류프로그램 운영
	우수인력	-입국비자 발급시 다중 우선순위 제도 -출입국시 절차간소화 장려와 가족취업 허용	-기술이민 등에 점수제 적용	-EU블루카드제도 도입	-입국비자 발급시 점수제 도입('12) -배우자와 자녀의 입국과 체류 허용	-개별기업차원에서 우수인력 채용	-개별기업차원에서 우수인력 채용
미숙련인력		-고용주 추천제 (고용허가제와 유사)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고용허가제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노동허가제 -노동시장테스트 (채용공고, 30개 직종은 면제)	-기능실습제도 -노동시장테스트 없음	-고용허가제, 스폰서제도 -외국인 고용시 내국인 고용 의무화 추진 중	-고용허가제, 스폰서제도 -외국인 고용시 내국인 고용 의무화 추진 중
사회통합	차별금지	-민권법(1964)	-인종차별법(1975)	-평등대우법(2006)	-외국인차별금지법 (2008)	-연방노동법	-노동법
	정책기관	-국토안보부와 산하 7개 집행기관	-이민.시민권부 (DIC)	-연방이민난민청 (BAMP),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내무부 소속 이민청 (OFII)	-내무부 이민국	-노동부
	사회통합 사업	-영어교육프로그램 (IFE) 제공 -온라인으로 미국생활 기본소양정보 제공	-"다양성 호주" 프로그램 -무료 언어훈련 직업교육	-사회통합코스에서 독 일어 교육 등 수행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	-프랑스 정부는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과 수용.통합 계약을 맺어 사회통합 유도	-특별한 정책 없음	-특별한 정책 없음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국의 외국인력정책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2012.

### 3. 국내 외국인력 정책동향

#### 1) 정부 정책동향

- 외국인력은 숙련수준을 기준으로 인력대상을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으로 구분함.
  -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력정책 역시 저숙련 외국인력정책과 전문기술 외국인력정책으로 크게 구분되어 추진되어 옴
- 저숙련 외국인력정책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중소기업 및 건설분야 등을 중심으로 단순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1991년 11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름
  - 동 제도는 해외투자기업이 현지법인을 통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당 인력이 중견기업 이상의 해외투자기업에만 집중되는 한계를 노정
- 이에 정부는 1993년 11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름
  -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체에 대해 외국인 연수생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국내 외국인력정책의 핵심제도로 활용되었으나 2007년 1월 고용허가제로 통합
  - 다만, 산업연수생은 도입규모가 제한적이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워 2004년 4월 해당 연수생이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취업이 가능한 연수취업제를 도입함
  - 한편, 동 제도의 허용업종은 중소기업, 건설업, 농축산업으로만 제한되어 서비스업의 경우 불법취업이 만연한 탓에 서비스 분야의 인력난에 대응하고자 2002년 12월 외국국적 동포 대상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도입하기에 이름
- 그러나 상기의 제도를 통한 제한적인 인력도입이 국내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고 불법취업문제를 양산하는 등 다양한 한계점을 노정함
  - 이에 정부는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이름.

[표 2-2] 국내 외국인력제도 변화

도입시기	법·제도	주요내용
1991.11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현지 근로자 능력 향상 차원의 기술연수
1993.11	산업연수생제도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를 국내 3D업종 연수 -고용허가제로 통합(2007.1)
2000.4	연수취업제	산업연수생이 근로자 신분으로 전환취업 가능 -연수1년 + 취업2년
2002.12	취업관리제	서비스분야 외국국적동포 대상 취업활동 허용 -고용허가제에 흡수·통합(2004)
2003.8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정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
2004.8	고용허가제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보장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 고용불가 입증할 경우 1년 이내 고용허가(최대 3년 미만으로 갱신가능)
2007.3	방문취업제	중국 및 구소련지역의 동포가 국내 연고자 없이 자유왕래하며 취업가능 -고용허가제 특례법으로 시행
2009.9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제	기존 3년에서 5년 미만으로 국내취업 가능
2010.6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제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변경 허용
2012.7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	사업주의 요청에 의거 출국 후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음
2011.	특별한국어시험 재취업제	재고용만료 귀국예정자에 대한 자진귀국 유도 및 영세기업의 숙련인력 계속 사용 지원(2017년 현재, 잠정보류)

## ■ 고용허가제

- 국내 생산직 인력에 대한 구인란이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요구 증대됨에 따라 그간 추진되던 관련제도가 2004년 8월 현행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됨
-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고용허가제는 순수외국인 대상 일반고용허가제와 외국국적 동포를 대상으로 허가하는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됨
  - 일반고용허가제에 의한 고용허가 국가는 2015년 현재,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15개국임
  -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고용허용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등 총 5개 업종임
- 2017년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허용업종이 사실상 동일함
  - 구체적으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 허용된 업종은 중소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만톤 미만),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임
  -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국적의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 허용된 업종은 서비스업(음식, 숙박 등 29개 업종), 중소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어업(20만톤 미만), 건설업임
-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의 도입허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비전문 취업(E-9)은 인력 송출국(16개국)의 한국어 시험합격자이며, 방문취업(H-2)은 연고동포(국내 초청), 무연고 동포(한국어 시험, 전산추첨)가 이에 해당함

[표 2-3] 외국인력 허용업종별 기준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가능)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3823)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산동물도매업(46205) -기타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도매업(46209) -가정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기타상품 전문소매업(478) -무점포 소매업(479) -육상여객 운송업(492) -호텔업(55111) -여관업(55112) -일반음식점업(5611) -기타 음식점업(5619) -사업시설 및 유지관리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752) -사회복지서비스업(87)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수리업(9521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육탕업(96121) -산업용세탁업(96911) -개인 간병인(96993) -가구내 고용활동(97)
		-냉장냉동창고업(52102) -재생용 자료수집 및 판매업(46791)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오디오물 출판업(59201)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좌동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서비스업(014)	-좌동

자료 : <https://www.eps.go.kr/>

[표 2-4]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비교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체류(취업기간)	▶3년 -비전문취업비자(E-9)으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3년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 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대상요건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	▶중국,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외 국국적 동포
취업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 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 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취업절차	▶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 업비자(E-9)로 입국→취업교육→사 업장배치 *사업장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교육 →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선택→근로계약 후 취업 *사업장 변경 무제한
사업자의 고용절차	▶내국인 구인노력→고용지원센터 (고용허가신청)→고용허가서발급→ 근로계약 후 고용 *근로개시 신고의무 불필요	▶내국인구인노력→고용센터에 특례 고용 가능확인서 발급→근로계약 →근무시작 및 근로개시신고 *근로개시 신고 필요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근로자 고 용허용 상한설정	▶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동포 추가 고용가능 (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자료 : <http://eps.hrdkorea.or.kr>.

- 한편, 전문기술 인력정책은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 다음의 체류자격을 부여 받  
아 국내 취업이 가능함
- 전문인력의 비자유형은 E계열 중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  
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이 이에 해당함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체류자격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최소 6개  
월에서 최대 2년을 상한으로 둠
- 구체적으로 예술홍행(E-6)와 회화지도(E-2)는 각각 체류기간 상한이 6개월, 1  
년이며 나머지는 모두 2년임

[표 2-5] 전문기술인력의 체류자격별 취업활동 범위와 체류기간

구 분	체류자격 해당자 및 취업활동 범위	체류기간 상한 (1회 부여 시)
교수(E-1)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 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회화지도 (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 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년
연구(E-3)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기술지도 (E-4)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 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으로 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전문직업 (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 사하고자 하는 자	2년
예술흥행 (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 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6개월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년

자료 : 출입국관리정책론(법무부) 및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유길상 외).

## 2) 충남도 정책동향

- 충남도 외국인력정책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권익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주거 제공 등에 한정하여 추진되고 있음
- 2017년 현재, 총 4개 사업을 시행 중이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충남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 등 지원기관 운영이 핵심사업임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경우, 천안, 아산, 서천, 당진 4개 지역에 기 개소 하였거나 개소 예정임



- 사업비 기준으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과 충남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사업은 도비 100%사업임
- 반면,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활동지원사업은 도와 해당시군간 매칭사업임
- 운영주체 기준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과 충남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사업은 도 주관사업이며,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상담활동지원사업은 해당시가 운영함

[표 2-6] 충남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주요내용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 : 4,500천원(도비 100%)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사업내용 : 지원센터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종사자 교육을 통한 지원서비스 질적제고
충남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사업비 : 150,000천원(도비 100%)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 근로자 -사업내용 : 사업장 폐쇄, 임금체불, 산재, 폭력 등의 인권침해 및 실직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지원(재취업 전 숙식 제공(1개월) 및 구직지원, 사회 적응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간 : 2018년 말(충남광역시 외국인 근로자 쉼터 위탁선정 심사)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	-사업비 : 10,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운영주체 : 아산시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 여성근로자 -사업내용 : 주거시설 임대운영(주공 2단지 아파트 101동 402호)
외국인근로자 상담활동지원	-사업비 : 220,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운영주체 : 천안, 아산, 서천, 당진 -사업대상 : 도내 외국인 근로자 -사업내용 :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사업비 지원(권익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자료 : 충남도 내부자료(2017).

## ■ 충남도 외국인력 지원사업 :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

- 2017년 현재,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정원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담인력으로 7명, 교육운영인력 4명이 관련업무 수행중임
- 총 예산은 2017년 기준으로 532,625천원 수준이며, 주요 지원사업은 상담, 교육, 문화, 특성화사업 등임

[표 2-7]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 조직현황

센터명	인원		센터장	상담			교육운영		
	정원	현원		팀장	과장	상담원	팀장	과장	대리
천안외국 인력지원센터	13	12	1	1	1	6(5)	1	1	2

\* 결혼이민자(F-5 3명, 귀화 2명), 현지어상담원(한국인 1명), ( )내는 현재인원

자료 : 천안 외국인력지원센터(<http://www.cfwc.or.kr/>).

○ 지원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담사업은 ①사업장 내 애로갈등, ②사업장 변경관련 애로, ③일상생활 고충, ④질병/부상/사망, ⑤귀국관련 고충, ⑥언어소통문제, ⑦행정신고 업무지원 등 7개 분야에서 5개국 언어로 이루어짐
- 교육사업은 ①한국어, ②정보화, ③생활법률, ④귀국의식, ⑤산업안전 등 5개 분야이며, 이 중 귀국의식교육과 관련하여 체류 및 귀국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 문화사업은 한국 및 외국문화 소개를 통해 한국생활 적응과 다문화적 감수성 배양을 위해 외국인 축제개최, 한국문화탐방, 힐링캠프를 운영함
- 특성화 사업은 보건위생 및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 각종 범죄예방, 정서함양 등을 목적으로 교통안전교육, 무료진료, 음악교실, 자원봉사활동 등을 지원함

[표 2-8] 외국인력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속한 전화 상담과 전문적인 내방 상담</li> <li>•농축산·어업 및 원거리 소외지역을 위한 방문상담</li> <li>•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원 교육</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근로자의 의사소통 능력 및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직장문화, 직장윤리, 한국생활에 필요한 제반 법규 교육</li> <li>•귀국지원 통합서비스, 교육강사 교육</li> </ul>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한국문화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 교류의 장 마련</li> </ul>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법률 및 무료진료, 체육활동, 이미용 등</li> </ul>

## 제3장. 충남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 및 고용실태

### 1. 외국인 노동시장 일반현황

- 국내 외국인 노동력의 공급을 나타내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생산가능인구)은 2012년 1,114천명에서 2016년 1,425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6.3%씩 증가하는 추세임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의 연평균 증가율이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경기·인천 7.5%, 대전·충남·충북 7.2%, 부산·울산·경남 6.4%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현재, 만 15세 이상 외국인 중 경기·인천지역이 가장 많은 539천명으로 전국대비 37.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 385천명(27.0%), 부산·울산·경남 164천명(11.5%)임
  -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인천지역에 15세 이상 외국인의 64.9%인 925천명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5.1%인 500천명 수준임
- 대전·충남·충북(충청권)의 경우, 2016년 현재, 만 15세 이상 외국인은 총 132천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하고 있음
  - 구체적인 비중추이를 보면 2012년 9.0%에서 2016년 9.3%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
  - 또한 15세 이상 외국인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100천명에서 2016년 132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7.2%씩 증가하는 추세임

[표 3-1] 지역별 생산가능인구(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2		2016		연 평균 증가율 (‘12~’16)
	15세 이상	비중	15세 이상	비중	
전국	1,114	100.0	1,425	100.0	6.3
수도권	731	65.6	925	64.9	6.1
서울	327	29.4	385	27.0	4.2
경기·인천	404	36.3	539	37.8	7.5
비수도권	383	34.4	500	35.1	6.9
부산·울산·경남	128	11.5	164	11.5	6.4
대전·충남·충북	100	9.0	132	9.3	7.2
대구·경북	66	5.9	84	5.9	6.2
광주·전남·전북	66	5.9	83	5.8	5.9
강원·제주	23	2.1	36	2.5	11.9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 국내 경제활동인구(외국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824천명에서 2016년 1,005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5.1%씩 증가하는 추세임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의 연평균 증가율이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대전·충남·충북 6.6%, 경기·인천 6.2%, 광주·전남·전북 5.7%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총 1,005천명으로 이 중 경기·인천지역이 가장 많은 409천명으로 전국대비 40.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 240천명(23.9%), 부산·울산·경남 125천명(12.4%)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인천지역에 경제활동인구의 64.6%인 649천 명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5.4%인 356천명 수준임
- 대전·충남·충북(충청권)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72천명에서 2016년 93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6.6%씩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현재, 경제활동인구는 총 93천명으로 전국 대비 9.3%를 차지
  - 또한 동 기간 중 전국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2012년 8.7%에서 2016년 9.3%로 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 지역별 경제활동인구(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2		2016		연평균증가율 ('12~'16)
	경제활동인구*	비중	경제활동인구	비중	
전국	824	100.0	1,005	100.0	5.1
수도권	543	65.9	649	64.6	4.6
서울	222	26.9	240	23.9	2.0
경기·인천	321	39.0	409	40.7	6.2
비수도권	282	34.2	356	35.4	6.0
부산·울산·경남	101	12.3	125	12.4	5.5
대전·충남·충북	72	8.7	93	9.3	6.6
대구·경북	49	5.9	57	5.7	3.9
광주·전남·전북	44	5.3	55	5.5	5.7
강원·제주	15	1.8	26	2.6	14.7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12년 791천명에서 2016년 962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5.0%씩 증가하는 추세임
  -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의 연평균 증가율이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대전·충남·충북 6.8%, 경기·인천 6.0%, 부산·울산·경남 5.1%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총 962천명으로 이 중 경기·인천지역이 가장 많은 392천명으로 전국대비 40.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 226천명(23.5%), 부산·울산·경남 122천명(12.7%)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인천지역에 외국인 취업자의 64.2%인 618천명이 거주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35.9%인 345천명 수준임
- 대전·충남·충북(충청권)의 경우, 외국인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70천명에서 2016년 91천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6.8%씩 증가하는 추세임
  - 2016년 현재, 외국인 취업자는 총 91천명으로 전국 대비 9.5%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동 기간 중 전국대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은 2012년 8.8%에서 2016년 9.5%로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3] 지역별 취업자(외국인)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2		2016		연평균증가율 ('12~'16)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전국	791	100.0	962	100.0	5.0
수도권	514	65.0	618	64.2	4.7
서울	204	25.8	226	23.5	2.6
경기·인천	311	39.3	392	40.7	6.0
비수도권	277	35.0	345	35.9	5.6
부산·울산·경남	100	12.6	122	12.7	5.1
대전·충남·충북	70	8.8	91	9.5	6.8
대구·경북	49	6.2	55	5.7	2.9
광주·전남·전북	43	5.4	52	5.4	4.9
강원·제주	15	1.9	25	2.6	13.6

\* 취업자 : 가.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나.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다.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 경제활동참가율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현재,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으로 76.4%이며, 다음으로 경기·인천 75.8%, 강원·제주 70.2%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경기·인천, 대구·경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평균 3.5%p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 대비 소폭 하락함
  - 특히, 2016년 현재 수도권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수도권보다 낮은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이 2012~2016년 기간 중 2.2%p 하락한 것에 비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 큰 4.1%p 하락함
  - 한편, 대전·충남·충북의 경우, 2012년 72.0%에서 2016년 70.6%로 1.4%p하락함
- 다음으로 고용률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현재,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으로 74.1%이며, 다음으로 경기·인천 72.7%, 강원·제주 68.8%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의 고용률은 전국평균 3.4%p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 대비 소폭 하락함
  - 특히, 2016년 현재 수도권의 고용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낮은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이 2012~2016년 기간 중 3.4%p 하락한 것에 비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 큰 3.6%p 하락함
  - 한편, 대전·충남·충북의 경우, 2012년 72.0%에서 2016년 70.6%로 1.2%p하락함
- 끝으로 실업률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6년 현재,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5.8%이며, 다음으로 광주·전남·전북 5.5%, 경기·인천 4.2%, 강원·제주 3.8%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2~2016년 기간 중 서울,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은 실업률이 하락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시 말해, 동 기간 중 서울,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전북의 실업률은 전국 대비 개선된 반면 나머지 지역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6년 현재 수도권의 실업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이 2012~2016년 기간 중 1.3%p 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0.6%p 하락함
  - 한편, 대전·충남·충북의 경우, 2012년 2.8%에서 2016년 2.2%로 0.6%p 하락함

[표 3-4] 지역별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실업률(외국인) 현황

(단위: %, %p)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량 (`12~`16)	고용률**		증감량 (`12~`16)	실업률***		증감량 (`12~`16)
	2012	2016		2012	2016		2012	2016	
전국	74.0	70.5	3.5	71.0	67.6	-3.4	4.0	4.3	0.3
수도권	74.3	70.2	-4.1	70.4	66.8	-3.6	5.3	4.8	-0.6
서울	67.9	62.3	-5.6	62.3	58.6	-3.7	8.1	5.8	-2.3
경기·인천	79.4	75.8	-3.6	77.0	72.7	-4.3	3.1	4.2	1.0
비수도권	73.5	71.3	-2.2	72.3	68.9	-3.4	1.8	3.1	1.3
부산·울산·경남	78.7	76.4	-2.3	77.8	74.1	-3.7	1.0	2.4	1.4
대전·충남·충북	72.0	70.6	-1.4	69.8	68.6	-1.2	2.8	2.2	-0.6
대구·경북	74.6	67.8	-6.8	73.8	65.1	-8.7	0.0	3.5	3.5
광주·전남·전북	67.1	66.0	-1.1	66.0	63.2	-2.8	2.3	5.5	-3.2
강원·제주	65.9	70.7	4.8	65.7	68.8	3.1	0.0	3.8	3.8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 고용률(%) = (취업자 ÷ 15세이상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각 년도.

## 2. 외국인 고용동향

###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2015년 현재,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608,116명으로 이 중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228,836명으로 전국대비 37.6%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서울 116,817명(19.2%), 경남 52,135명(8.6%)등의 순임
- 국내 외국인 근로자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520,906명에서 2015년 608,116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8.0%씩 증가하는 추세임
  - 광역시도별로는 제주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충북 15.2%, 전남 13.6%, 울산 12.8%, 경북 12.2%, 충남 11.4%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은 전국평균인 8.0%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등 6개 지역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5] 전국 시도별 외국인 근로자 동향

(단위: 명, %)

구분	2013		2015		연평균 증가율 (‘13~’15)
	외국인근로자	비중	외국인근로자	비중	
합계	520,906	100.0	608,116	100.0	8.0
서울	116,113	22.3	116,817	19.2	0.3
부산	15,938	3.1	17,299	2.8	4.2
대구	10,639	2.0	12,348	2.0	7.7
인천	26,399	5.1	30,189	5.0	6.9
광주	6,345	1.2	7,538	1.2	9.0
대전	3,641	0.7	3,759	0.6	1.6
울산	10,829	2.1	13,779	2.3	12.8
세종	1,650	0.3	1,771	0.3	3.6
경기	187,392	36.0	228,836	37.6	10.5
강원	5,031	1.0	5,893	1.0	8.2
충북	14,602	2.8	19,371	3.2	15.2
충남	28,510	5.5	35,351	5.8	11.4
전북	9,364	1.8	11,389	1.9	10.3
전남	12,375	2.4	15,974	2.6	13.6
경북	23,475	4.5	29,530	4.9	12.2
경남	44,142	8.5	52,135	8.6	8.7
제주	4,461	0.9	6,137	1.0	17.3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

- 한편, 충남의 경우 2015년 현재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총 35,351명이며, 이 중 천안지역이 가장 많은 11,015명으로 충남대비 31.2%로 차지하며 다음으로 아산 9,247명(26.2%), 당진시 3,606명(10.2%), 논산 2,127명(6.0%), 보령 1,780명(5.0%), 서산 1,564(4.4%)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산업집적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권 지역에 도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71.9%인 25,432명이 거주함
- 도내 외국인 근로자 추이변화를 살펴보면 2013년 28,510명에서 2015년 35,351명으로 동 기준 중 연평균 11.4%씩 증가하는 추세임
  - 시군별로는 홍성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공주 21.0%, 보령 17.3%, 부여 16.8%, 태안 14.7%, 금산 13.7%, 서천 13.1%등임
  - 이들 지역은 도내 평균인 11.4%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천안, 아산, 서산, 논산, 계룡, 청양은 도내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임(예산군은 도내 평균과 동일함)



[표 3-6] 충남 시군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3		2015		연평균 증 가율 (`13~`15)
	외 국 인 근 로자	비중	외 국 인 근 로자	비중	
합계	28,510	100.0	35,351	100.0	11.4
천안시	9,024	31.7	11,015	31.2	10.5
공주시	447	1.6	654	1.9	21.0
보령시	1,293	4.5	1,780	5.0	17.3
아산시	7,461	26.2	9,247	26.2	11.3
서산시	1,411	4.9	1,564	4.4	5.3
논산시	2,036	7.1	2,127	6.0	2.2
계룡시	56	0.2	66	0.2	8.6
당진시	2,773	9.7	3,606	10.2	14.0
금산군	494	1.7	639	1.8	13.7
부여군	398	1.4	543	1.5	16.8
서천군	643	2.3	822	2.3	13.1
청양군	229	0.8	259	0.7	6.3
홍성군	756	2.7	1,137	3.2	22.6
예산군	910	3.2	1,130	3.2	11.4
태안군	579	2.0	762	2.2	14.7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

○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가별로는 중국(한국계)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44.2%인 268,55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55,092명(9.1%), 인도네시아 36,249명(6.0%), 캄보디아 30,680명(5.0%), 필리핀 27,627명(4.5%), 태국 23,158명(3.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충남도 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가별로는 중국(한국계)이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34.7%인 12,252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3,738명(10.6%), 캄보디아 3,279명(9.3%), 인도네시아 2,638명(7.5%), 태국 1,821명(5.2%)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전체 중국(한국계)근로자의 88.4%인 10,828명이 서북부 지역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지역에 거주함

[표 3-7] 국내 시도·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2015)

[단위 : 명]

구분	합계	동북아North-east Asia					동남아시아South-east Asia										남부 아시아 아	중앙 아시아 아	미국	러시아	기타
		소계	중국	중국 (한국 계)	대만	일본	몽골	소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기타					
합계	608,116	300,088	21,649	268,558	243	1,594	8,044	188,367	55,092	27,627	23,158	36,249	30,680	13,855	221	1,485	63,148	31,934	12,083	818	11,678
비중	100.0	49.3	3.6	44.2	0.0	0.3	1.3	31.0	9.1	4.5	3.8	6.0	5.0	2.3	0.0	0.2	10.4	5.3	2.0	0.1	1.9
서울	116,817	103,300	4,195	97,947	151	532	475	3,772	1,109	1,258	486	252	253	133	141	140	1,414	831	3,606	151	3,743
부산	17,269	3,861	1,305	2,305	7	96	148	8,869	3,472	1,288	451	2,045	723	839	6	45	1,818	1,277	728	72	674
대구	12,348	2,322	500	1,698	2	30	92	5,922	1,886	1,251	238	1,802	462	278	2	3	2,070	821	649	18	546
인천	30,189	12,523	1,214	10,691	10	31	577	11,761	3,559	1,986	1,749	2,218	943	1,252	8	46	3,287	1,560	562	27	469
광주	7,538	1,813	335	1,404	1	13	60	3,338	796	569	288	673	701	263	3	45	928	852	343	8	256
대전	3,769	1,758	480	1,164	3	62	49	591	160	138	61	136	69	16	3	8	304	122	512	21	451
울산	13,779	6,722	346	6,107	0	15	254	3,934	1,230	861	217	792	558	266	3	7	1,857	734	229	6	297
세종	1,771	492	56	415	1	4	16	856	273	62	124	169	163	65	0	0	196	153	44	3	27
경기	228,836	120,284	4,910	110,845	44	550	3,935	68,433	15,671	12,097	12,715	8,610	12,991	6,031	26	292	24,599	10,535	2,491	366	2,128
강원	5,883	1,473	416	986	0	12	59	2,850	797	235	199	592	742	276	0	9	728	240	301	11	290
충북	19,371	7,007	375	6,112	0	19	501	6,715	2,042	1,024	1,080	1,067	1,105	391	1	5	3,152	1,851	300	18	328
충남	35,351	13,870	1,115	12,252	0	92	411	13,560	3,738	1,104	1,821	2,638	3,279	839	2	139	4,275	2,752	480	55	359
전북	11,389	2,925	549	2,103	1	16	256	5,008	1,328	592	408	944	1,209	435	0	92	1,943	922	255	3	333
전남	15,974	4,180	1,389	2,455	10	25	301	7,675	2,662	581	448	1,614	1,778	328	1	263	2,384	1,138	278	5	314
경북	29,530	6,060	1,281	4,433	0	50	296	15,479	5,064	1,711	916	4,558	2,211	941	9	69	5,103	1,841	557	19	471
경남	52,135	9,590	2,050	6,993	2	43	502	26,602	10,407	2,764	1,726	6,821	3,204	1,416	16	248	8,535	6,274	467	32	635
제주	6,137	1,908	1,133	648	11	4	112	3,002	898	106	231	1,318	289	86	0	74	555	31	281	3	357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

[표 3-8] 충남 시군·국가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동북아North-eastAsia				동남아시아South-eastAsia										중남 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소계	중국	중국 (한국계)	일본	몽골	소계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기타						
합계	35,351	13,870	1,115	12,252	92	411	13,560	3,738	1,104	1,821	2,638	3,279	839	2	139	4,275	2,752	480	55	359
계	100.0	39.2	3.2	34.7	0.3	1.2	38.4	10.6	3.1	5.2	7.5	9.3	2.4	0.0	0.4	12.1	7.8	1.4	0.2	1.0
천안	11,015	5,348	155	4,997	49	147	3,424	760	342	589	684	770	252	1	26	1,139	781	205	29	89
안	31.2	15.1	0.4	14.1	0.1	0.4	9.7	2.1	1.0	1.7	1.9	2.2	0.7	0.0	0.1	3.2	2.2	0.6	0.1	0.3
공주	654	192	19	161	1	11	278	60	11	34	85	76	12	0	0	111	12	35	2	24
주	1.9	0.5	0.1	0.5	0.0	0.0	0.8	0.2	0.0	0.1	0.2	0.2	0.0	0.0	0.0	0.3	0.0	0.1	0.0	0.1
보령	1,780	421	255	146	0	20	1,130	567	18	80	295	134	20	0	16	172	29	18	0	10
령	5.0	1.2	0.7	0.4	0.0	0.1	3.2	1.6	0.1	0.2	0.8	0.4	0.1	0.0	0.0	0.5	0.1	0.1	0.0	0.0
아산	9,247	3,942	141	3,686	34	81	3,000	667	307	492	588	652	269	1	24	958	1,200	63	19	65
산	26.2	11.2	0.4	10.4	0.1	0.2	8.5	1.9	0.9	1.4	1.7	1.8	0.8	0.0	0.1	2.7	3.4	0.2	0.1	0.2
서산	1,564	841	43	779	1	18	402	95	25	58	106	106	9	0	3	116	109	54	1	41
산	4.4	2.4	0.1	2.2	0.0	0.1	1.1	0.3	0.1	0.2	0.3	0.3	0.0	0.0	0.0	0.3	0.3	0.2	0.0	0.1
논산	2,127	243	15	194	6	28	1,443	244	73	171	118	761	54	0	22	313	93	18	1	16
산	6.0	0.7	0.0	0.5	0.0	0.1	4.1	0.7	0.2	0.5	0.3	2.2	0.2	0.0	0.1	0.9	0.3	0.1	0.0	0.0
계룡	66	23	13	10	0	0	15	13	0	0	0	2	0	0	0	10	0	7	0	11
룡	0.2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당진	3,606	1,507	112	1,366	0	29	1,094	322	104	161	227	176	97	0	7	671	292	16	0	26
진	10.2	4.3	0.3	3.9	0.0	0.1	3.1	0.9	0.3	0.5	0.6	0.5	0.3	0.0	0.0	1.9	0.8	0.0	0.0	0.1
금산	639	146	18	106	0	22	275	59	41	24	80	52	13	0	6	152	51	5	0	10
산	1.8	0.4	0.1	0.3	0.0	0.1	0.8	0.2	0.1	0.1	0.2	0.1	0.0	0.0	0.0	0.4	0.1	0.0	0.0	0.0
부여	543	96	9	80	0	7	306	55	19	68	32	122	10	0	0	87	34	9	0	11
여	1.5	0.3	0.0	0.2	0.0	0.0	0.9	0.2	0.1	0.2	0.1	0.3	0.0	0.0	0.0	0.2	0.1	0.0	0.0	0.0
서천	822	214	157	52	0	5	445	172	40	10	166	22	10	0	25	117	28	7	1	10
천	2.3	0.6	0.4	0.1	0.0	0.0	1.3	0.5	0.1	0.0	0.5	0.1	0.0	0.0	0.1	0.3	0.1	0.0	0.0	0.0
청양	259	35	1	33	0	1	143	32	14	14	16	61	6	0	0	59	14	3	0	5
양	0.7	0.1	0.0	0.1	0.0	0.0	0.4	0.1	0.0	0.0	0.0	0.2	0.0	0.0	0.0	0.2	0.0	0.0	0.0	0.0
홍성	1,137	286	25	250	0	11	633	237	33	54	79	196	30	0	4	141	40	17	2	18
성	3.2	0.8	0.1	0.7	0.0	0.0	1.8	0.7	0.1	0.2	0.2	0.6	0.1	0.0	0.0	0.4	0.1	0.0	0.0	0.1
예산	1,130	346	30	287	0	29	522	131	66	62	72	137	51	0	3	173	66	13	0	10
산	3.2	1.0	0.1	0.8	0.0	0.1	1.5	0.4	0.2	0.2	0.2	0.4	0.1	0.0	0.0	0.5	0.2	0.0	0.0	0.0
태안	762	230	122	105	1	2	450	324	11	4	90	12	6	0	3	56	3	10	0	13
안	2.2	0.7	0.3	0.3	0.0	0.0	1.3	0.9	0.0	0.0	0.3	0.0	0.0	0.0	0.0	0.2	0.0	0.0	0.0	0.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2016.

## 2) 고용허가제 고용동향

- 2015년 현재 국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총 66,345개소로 이 중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27,644개소로 전국대비 41.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남 7,153개소(10.8%), 충남 4,616개소(7.0%), 서울 4,350개소(6.6%)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국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53.5%인 35,515개소가 소재함
- 국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64,109개소에서 2016년 하반기 66,345개소로 동 기간 중 연평균 0.9%씩 증가하는 추세임
  - 시도별로는 제주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세종 12.9%, 전남 11.7%, 전북 8.7%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외에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충남, 경북, 경남지역도 (+)의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주로 광역시에 소재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특히, 서울은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많은 연평균 12.1%씩 감소하는 지역임
- 2016년 하반기 현재, 2012년 하반기 대비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비중이 낮아진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주로 광역시로 나타남
  - 반면 비중이 높아진 지역은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주로 광역도에서 이와 같은 양상을 보임
  - 한편, 광주와 경기지역은 비중변화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충남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현재, 외국인 고용사업장은 총 4,616개소로 전국 대비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매년 전국대비 외국인 고용사업장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구체적으로 2012년 하반기에 6.1%에서 2013년 및 2014년 하반기 6.6%, 2015년 하반기 6.7%, 2016년 하반기 7.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3,914개소에서 2016년 하반기 4,616개소로 동 기간 중 연평균 4.2%씩 증가하는 추세임

[표 3-9] 전국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사업장 수)

(단위: 개소, %)

구분	2012하반기		2013하반기		2014하반기		2015하반기		2016하반기		연평균 증가율 (12~16)
	사업장수	비중	사업장수	비중	사업장수	비중	사업장수	비중	사업장수	비중	
합계	64,109	100.0	61,736	100.0	67,381	100.0	68,665	100.0	66,345	100.0	0.9
서울	7,283	11.4	5,927	9.6	6,904	10.2	6,854	10.0	4,350	6.6	-12.1
부산	1,776	2.8	1,711	2.8	1,857	2.8	1,840	2.7	1,772	2.7	-0.1
대구	1,211	1.9	1,184	1.9	1,233	1.8	1,231	1.8	1,201	1.8	-0.2
인천	3,667	5.7	3,536	5.7	3,731	5.5	3,683	5.4	3,521	5.3	-1.0
광주	763	1.2	777	1.3	829	1.2	805	1.2	780	1.2	0.6
대전	258	0.4	218	0.4	227	0.3	251	0.4	226	0.3	-3.3
울산	1,266	2.0	1,217	2.0	1,296	1.9	1,323	1.9	1,179	1.8	-1.8
세종	141	0.2	178	0.3	201	0.3	227	0.3	229	0.3	12.9
경기	26,708	41.7	25,184	40.8	26,851	39.8	27,311	39.8	27,644	41.7	0.9
강원	759	1.2	796	1.3	923	1.4	963	1.4	1,018	1.5	7.6
충북	2,094	3.3	2,220	3.6	2,473	3.7	2,558	3.7	2,665	4.0	6.2
충남	3,914	6.1	4,065	6.6	4,444	6.6	4,621	6.7	4,616	7.0	4.2
전북	1,381	2.2	1,536	2.5	1,754	2.6	1,819	2.6	1,929	2.9	8.7
전남	2,088	3.3	2,248	3.6	2,685	4.0	2,990	4.4	3,252	4.9	11.7
경북	3,250	5.1	3,404	5.5	3,691	5.5	3,645	5.3	3,589	5.4	2.5
경남	6,839	10.7	6,749	10.9	7,353	10.9	7,488	10.9	7,153	10.8	1.1
제주	711	1.1	786	1.3	929	1.4	1,056	1.5	1,221	1.8	14.5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2015년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취업한 외국인인 총 221,914명으로 이 중 경기 지역이 가장 많은 89,085명으로 전국대비 40.1%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남 29,873명(13.5%), 충남 16,986명(7.7%), 경북 15,846명(7.1%)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46.3%인 102,730명이 고용됨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162,858명에서 2016년 하반기 221,914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8.0%씩 증가하는 추세임
- 시도별로는 세종지역의 연평균 증가율이 17.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충북 13.6%, 제주 13.2%, 전남 12.6%, 강원 11.2%, 경기 9.8%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은 전국평균인 8.0%를 상회하는 지역인 반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경남은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임(전북은 전국평균과 동일)
- 결론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역도의 증가추세가 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6년 하반기 현재, 2012년 하반기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낮아진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경북, 경남지역임
- 반면 비중이 높아진 지역은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임
- 한편, 대전과 전북지역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의 변화 없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0] 전국 고용허가제 고용동향(외국인근로자수)

(단위: 명, %)

구분	2012하반기		2013하반기		2014하반기		2015하반기		2016하반기		연평균 증가율 (12~16)
	근로자수	비중	근로자수	비중	근로자수	비중	근로자수	비중	근로자수	비중	
합계	162,858	100.0	178,200	100.0	204,162	100.0	212,319	100.0	221,914	100.0	8.0
서울	1,572	1.0	1,390	0.8	1,630	0.8	1,576	0.7	1,777	0.8	3.1
부산	6,462	4.0	6,597	3.7	7,638	3.7	7,977	3.8	7,951	3.6	5.3
대구	4,590	2.8	5,081	2.9	5,880	2.9	5,976	2.8	5,935	2.7	6.6
인천	9,988	6.1	11,129	6.2	12,211	6.0	11,804	5.6	11,868	5.3	4.4
광주	2,858	1.8	2,991	1.7	3,389	1.7	3,460	1.6	3,517	1.6	5.3
대전	568	0.3	613	0.3	590	0.3	707	0.3	677	0.3	4.5
울산	4,135	2.5	4,320	2.4	4,936	2.4	5,051	2.4	4,526	2.0	2.3
세종	490	0.3	687	0.4	803	0.4	879	0.4	943	0.4	17.8
경기	61,233	37.6	69,445	39.0	79,196	38.8	82,235	38.7	89,085	40.1	9.8
강원	1,859	1.1	2,091	1.2	2,347	1.1	2,664	1.3	2,846	1.3	11.2
충북	6,901	4.2	8,106	4.5	9,457	4.6	10,061	4.7	11,476	5.2	13.6
충남	12,941	7.9	13,531	7.6	14,899	7.3	15,563	7.3	16,986	7.7	7.0
전북	4,925	3.0	5,443	3.1	6,127	3.0	6,482	3.1	6,693	3.0	8.0
전남	5,814	3.6	6,182	3.5	7,881	3.9	8,930	4.2	9,360	4.2	12.6
경북	12,135	7.5	13,338	7.5	15,688	7.7	15,725	7.4	15,846	7.1	6.9
경남	24,832	15.2	25,553	14.3	29,671	14.5	31,065	14.6	29,873	13.5	4.7
제주	1,555	1.0	1,703	1.0	1,819	0.9	2,164	1.0	2,555	1.2	13.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충남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12,941명으로 전국 대비 7.7%를 차지하고 있음
- 구체적인 비중추이를 보면 2012년 하반기에 7.9%에서 2013년 하반기 7.6%, 2014년 및 2015년 하반기 7.3%로 지속 감소하다 2016년 하반기에는 7.7%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도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하반기 12,941명에서 2016년 하반기 16,986명으로 동 기간 중 연평균 7.7%씩 증가함

[표 3-11] 고용허가제 사업장의 외국인 평균고용 규모

(단위: 명)

구분	2012하반기	2013하반기	2014하반기	2015하반기	2016하반기
전국	2.5	2.9	3.0	3.1	3.3
서울	0.2	0.2	0.2	0.2	0.4
부산	3.6	3.9	4.1	4.3	4.5
대구	3.8	4.3	4.8	4.9	4.9
인천	2.7	3.1	3.3	3.2	3.4
광주	3.7	3.8	4.1	4.3	4.5
대전	2.2	2.8	2.6	2.8	3.0
울산	3.3	3.5	3.8	3.8	3.8
세종	3.5	3.9	4.0	3.9	4.1
경기	2.3	2.8	2.9	3.0	3.2
강원	2.4	2.6	2.5	2.8	2.8
충북	3.3	3.7	3.8	3.9	4.3
충남	3.3	3.3	3.4	3.4	3.7
전북	3.6	3.5	3.5	3.6	3.5
전남	2.8	2.8	2.9	3.0	2.9
경북	3.7	3.9	4.3	4.3	4.4
경남	3.6	3.8	4.0	4.1	4.2
제주	2.2	2.2	2.0	2.0	2.1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국내 전체사업장의 평균고용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하반기 2.5명에서 2016년 하반기 3.3명으로 약 0.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하반기 대비 2016년 하반기의 평균고용규모가 감소한 지역은 전북과 제주지역이며, 나머지 모든 지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하반기 현재, 평균고용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9명이며 다음으로 부산과 광주 각각 4.5명, 경북 4.4명, 충북 4.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상가지역 외 인천, 울산, 세종, 충남, 전북, 경남지역은 전국평균 3.3명을 상회하는 반면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전남, 제주는 전국평균을 하회하는 지역임

- 충남의 경우, 2016년 하반기 현재, 고용허가제 사업장 외국인의 평균고용 규모는 3.7명 수준으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 평균고용 규모추이를 보면 2012년 및 2013년 하반기에 3.3%에서 2014년 및 2015년 하반기 3.4%, 2016년 하반기에는 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 공급측면<sup>3)</sup>

#### 1) 외국인 고용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는 동 조사의 총 37개 조사항목 중 18개 항목을 추출하여 공급측면에서 외국인 고용실태를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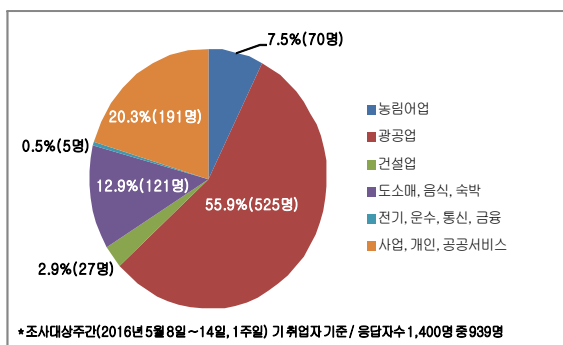
- 조사목적
  -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여부, 취업분야 등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여 외국인력 정책 및 국내 노동시장분석의 기초자료 제공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75호)
-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시기
  - 조사기준시점 : 2016. 5. 15.
  - 조사대상기간 : 2016. 5. 8.(일) ~ 5. 14.(토)
  - 조사실시기간 : 2016. 5. 17.(화) ~ 5. 30.(월)(14일간)
- 조사·작성주기
  - 연간(1년 주기)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법무부 「등록외국인 명부」와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명부」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만 15세 이상 외국인 11,564명(충청권 1400명)
  - 조사단위 : 개인
- 조사항목
  - 기본사항(학력, 혼인상태, 거처종류 등), 성별·국적별·체류자격별 경제활동상태, 취업자 특성사항(종사상지위, 산업·직업, 취업시간, 근속기간 등) 등 37개 항목
-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응답자가 희망하는 경우 전화 또는 응답자 기입방식 조사도 일부 허용
  - 언어 소통 곤란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콜센터 활용
- 조사체계
  -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고용한 임시조사원이 조사대상 외국인을 직접 면접조사하는 방식

3)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는 2016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외국인 고용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됨. 유의할 점은 동 조사의 결과를 광역시도 단위가 아닌 7개 권역단위로 발표함에 따라 충남은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에 포함된 바, 충남지역만의 외국인 고용실태로 보기에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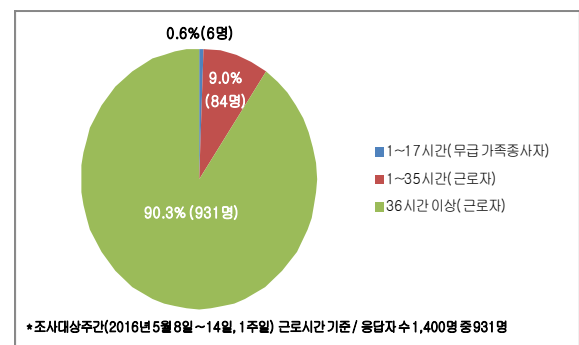


## 2) 조사결과

-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는 산업으로는 광공업이 5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20.3%),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12.9%), 농림어업(7.5%)등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시간으로 구분하면 36시간 이상(근로자)이 9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음으로 1~35시간(근로자)(9.0%), 1~17시간(무급 가족종사자)(0.6%)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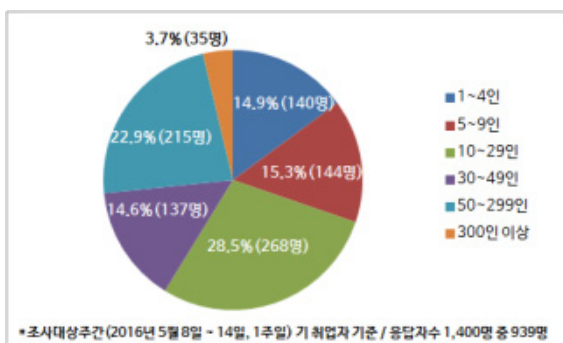


[그림 4-1] 산업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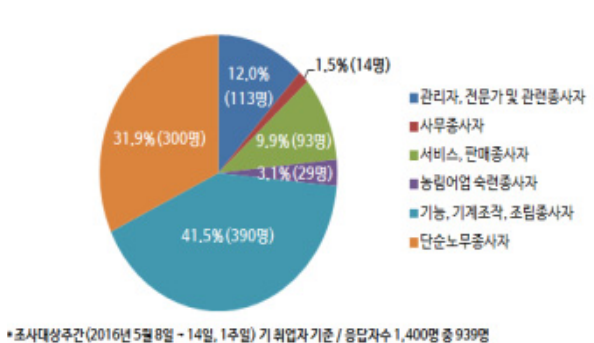


[그림 4-2] 취업시간 구분

- 고용사업장의 종사자수 규모는 10~29인 업체가 2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50~299인(22.9%), 5~9인(15.3%), 1~4인(14.9%), 30~49인(14.6%)등임
-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으로는 기능, 기계조작, 조립종사자가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단순 노무종사자(31.9%),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2.0%), 서비스, 판매종사자(9.9%)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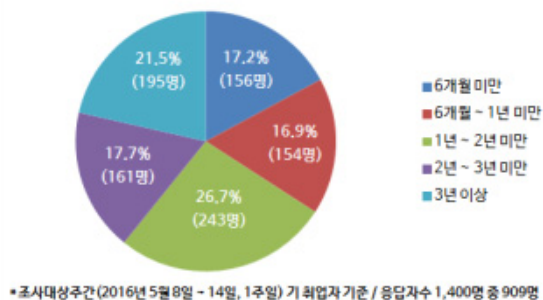


[그림 4-3] 사업장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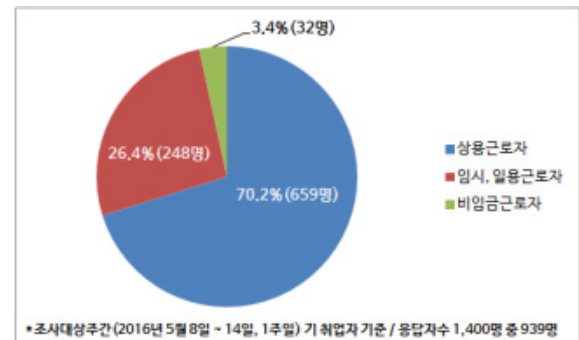


[그림 4-4] 직업분류

- 외국인 근로자의 근속기간으로는 1년~2년 미만이 2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3년 이상(21.5%), 2년~3년 미만(17.7%), 6개월 미만(17.2%), 6개월~1년 미만(16.9%)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근로자가 7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임시, 일용근로자(26.4%), 비임금 근로자(3.4%)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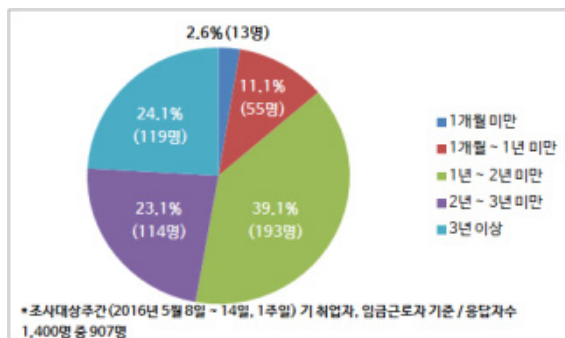


[그림 4-5] 근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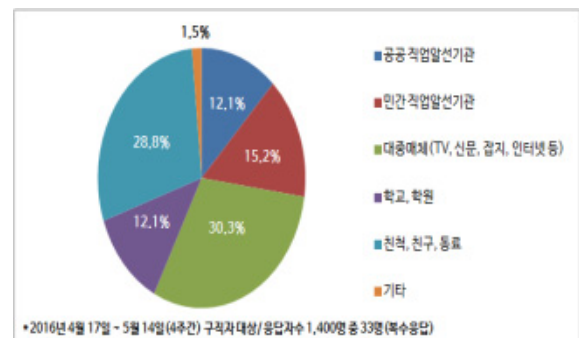


[그림 4-6] 종사상 지위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계약기간은 1년~2년 미만이 3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3년 이상(24.1%), 2년~3년 미만(23.1%), 1개월~1년 미만(11.1%)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경로는 대중매체(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가 전체 응답자의 3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친척, 친구, 동료 (28.8%), 민간 직업알선기관(15.2%), 공공 직업알선기관(12.1%), 학교, 학원 (12.1%)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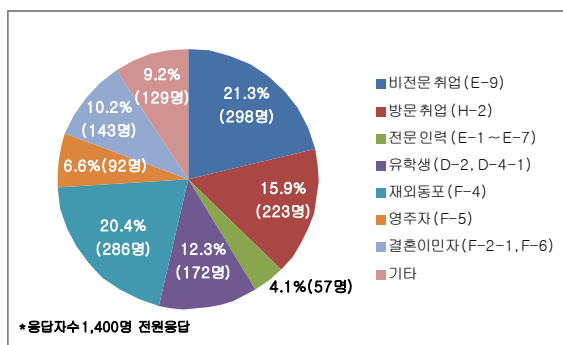


[그림 4-7] 고용계약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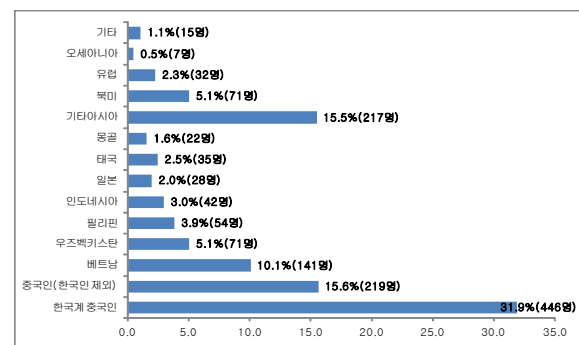


[그림 4-8] 구직경로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으로는 비전문 취업(E-9)이 전체 응답자의 2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재외동포(F-4)(20.4%), 방문취업(H-2)(15.9%), 유학생(D-2, D-4-1)(1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국적으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응답자의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중국인(15.6%), 기타 아시아(15.5%), 베트남(10.1%), 우즈베키스탄(5.1%), 북미(5.1%)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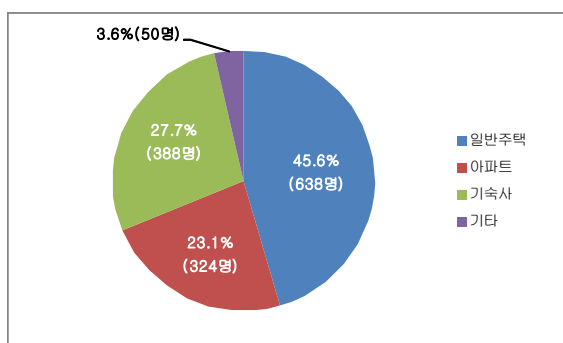


[그림 4-9] 체류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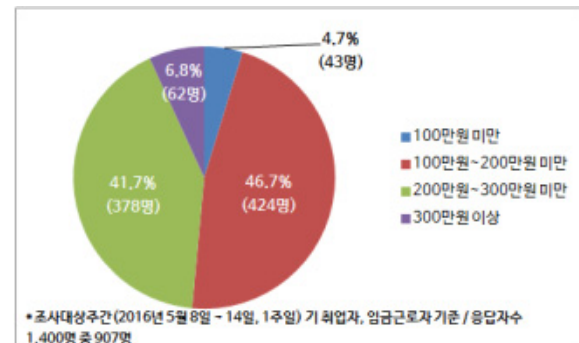


[그림 4-10] 국적분류

-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거처로는 일반주택이 전체 응답자의 4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기숙사(27.7%), 아파트(23.1%), 기타(3.6%)등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으로는 100만원~200만원 미만인 전체 응답자의 4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200만원~300만원 미만(41.7%), 300만원 이상(6.8%), 100만원 미만(4.7%)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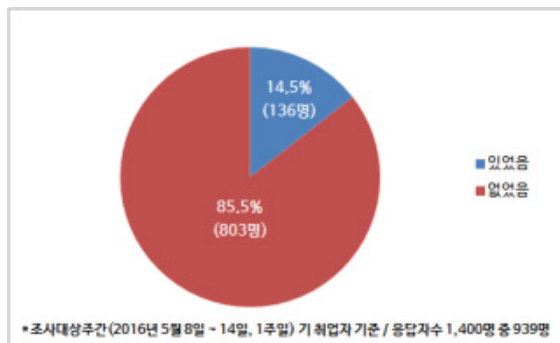


[그림 4-11] 거처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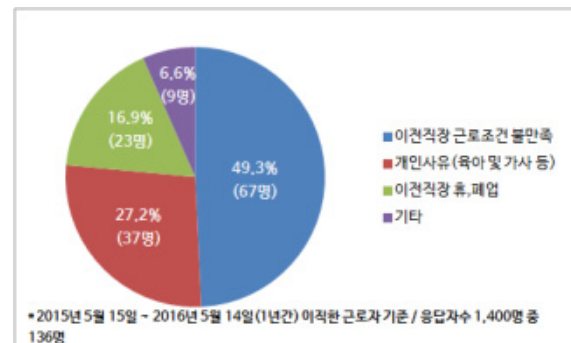


[그림 4-12] 월평균 임금

-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변경 여부로는‘없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체 응답자의 85.5%인 반면, 14.5%는‘있었음’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관련하여 이직이유로는 이전직장 근로조건 불만족이 전체 응답자의 49.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개인사유(육아 및 가사 등)(27.2%), 이전 직장 휴폐업(16.9%), 기타(6.6%)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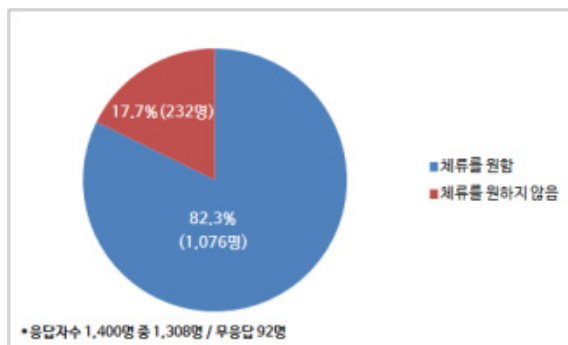


[그림 4-13] 직장변경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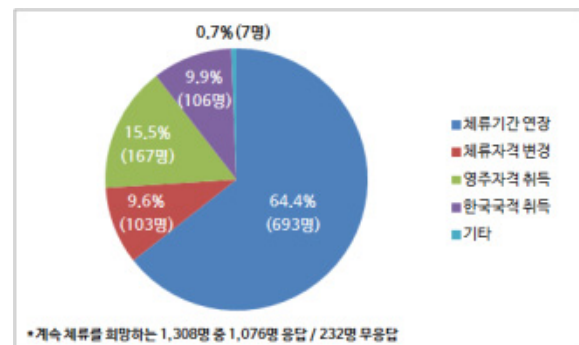


[그림 4-14] 이직이유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여부로는‘계속체류를 원함’이 전체 응답자의 82.3%인 반면 ‘체류를 원치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7.7%로 나타남
- 관련하여 체류방법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연장이 전체 응답자의 6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영주자격 취득(15.5%), 한국국적 취득(9.9%), 체류자격 변경(9.6%)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5] 계속체류여부



[그림 4-16] 계속체류방법

#### 4.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 : 수요측면

##### 1) 외국인 고용사업장 조사 개요

- 본 연구에서 실시한 외국인 고용사업장 대상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설문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채용계획 및 방법, 만족도, 애로사항,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력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조사기간

- 2017년 8월 말 ~ 9월 초(약 2주간)

###### ○ 조사대상

- 조사대상 :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고용허가제)
- 조사지역 : 도내 전역(제조업이 밀집한 천안·아산 비중을 높게 설정)
- 조사업체 : 208개소

###### ○ 조사항목

- 기본사항(업종, 소재지, 회사명 등), 채용 관련 사유, 계획, 만족도, 이유, 애로사항, 고용정책수요, 외국인 근로자 특성사항 등 총 15개 항목

###### ○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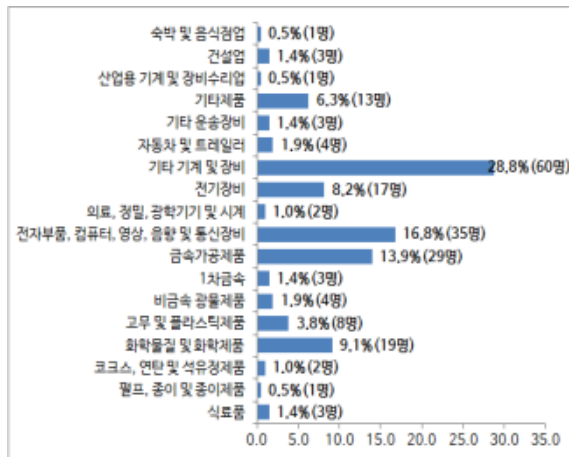
- 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설문조사 실시

###### ○ 조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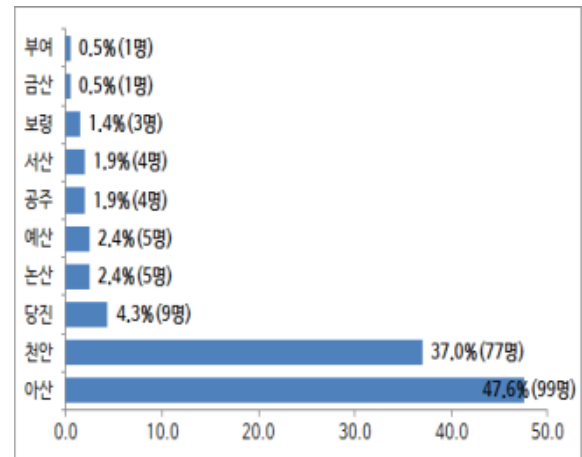
- 전문 리서치 업체에서 고용한 조사원이 조사대상 사업장 관련인을 직접 면접조사

##### 2) 표본특성

- 설문대상인 도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208개소의 주요 영위업종 중 기타 기계 및 장비업의 비중이 전체 대비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업(16.8%), 금속가공제품(13.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응답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역으로는 아산이 전체 대비 4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천안(37.0%), 당진(4.3%)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7] 사업장 영위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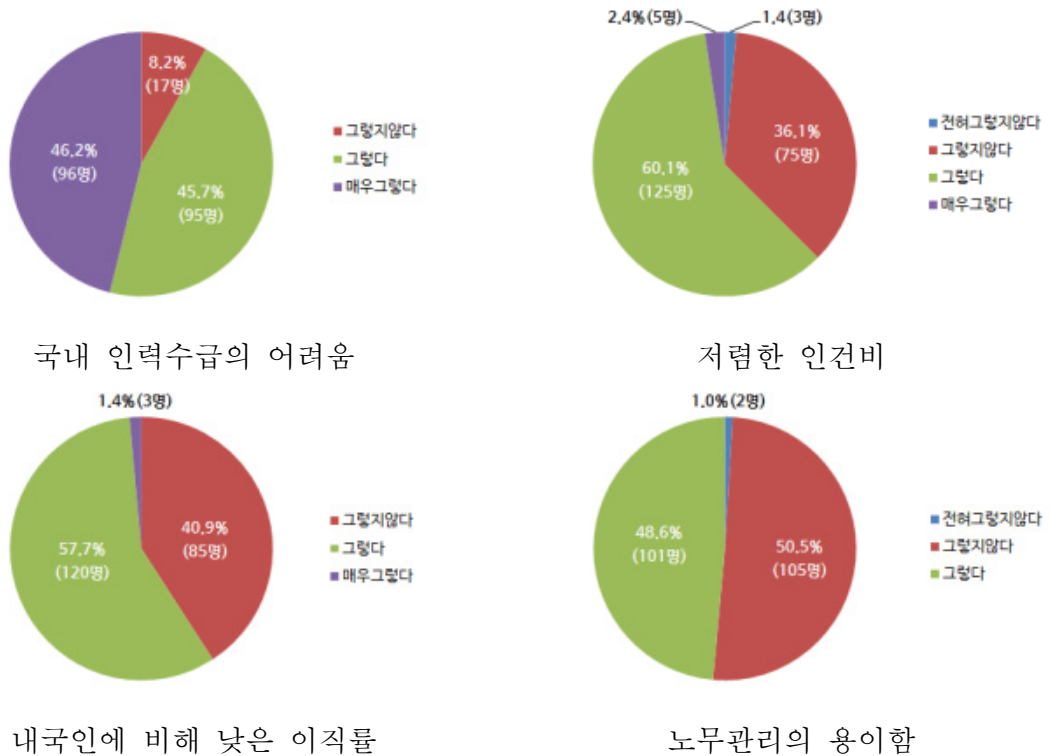


[그림 4-18] 사업장 소재지역

### 3)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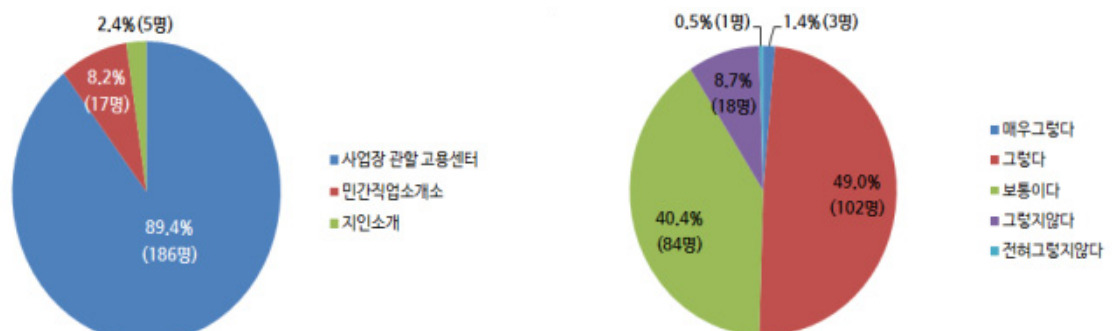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고용사유로 첫째, 국내인력의 구인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91.9%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8.2%에 그침
- 둘째, 저렴한 인건비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62.5%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7.5%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셋째, 내국인에 비해 낮은 이직률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59.1%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0.9%로 나타남
- 끝으로, 노무관리의 용이성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48.6%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1.5%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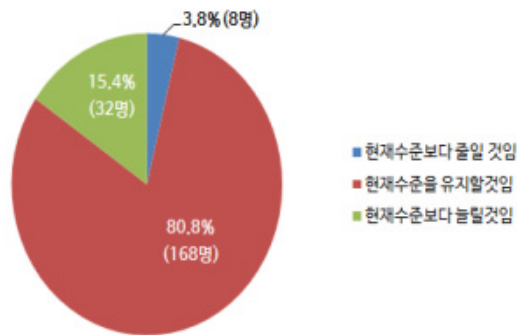
[그림 4-19] 고용사유

- 채용방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89.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민간직업소개소(8.2%), 지인소개(2.4%)등의 순임
- 채용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50.4%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9.2%로 나타남



- 향후 채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80.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현재 수준보다 늘릴 것'(15.4%), '현재 수준보다 줄일 것'(3.8%)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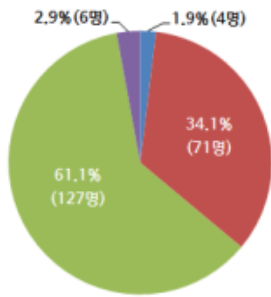


[그림 4-22] 채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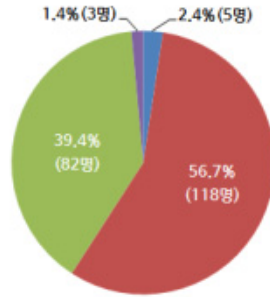
○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상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애로사항으로 첫째, 인력관리의 어려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63.9%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6.1%로 나타남
- 둘째, 높은 이직률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40.9%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9.1%로 나타남
- 셋째, 의사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63.0%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37.0%로 나타남
- 넷째, 근로태도 불량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22.1%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7.9%로 나타남
- 다섯째, 낮은 숙련도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51.4%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48.6%로 나타남
- 여섯째, 낮은 생산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41.3%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8.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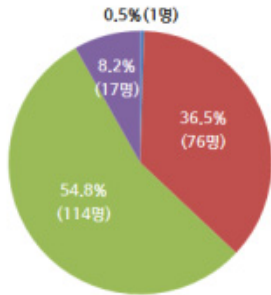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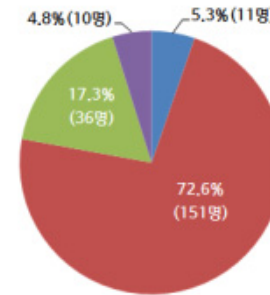
인력관리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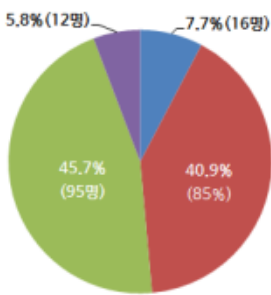
높은 이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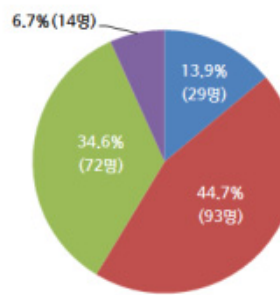
의사소통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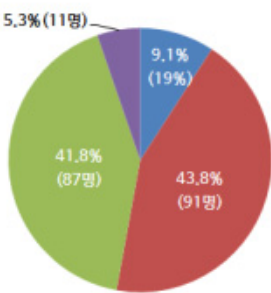
근로태도 불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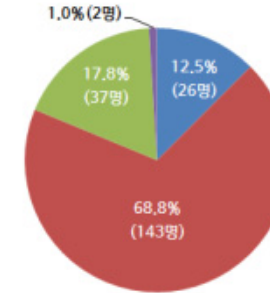
낮은 숙련도



낮은 생산성



애사심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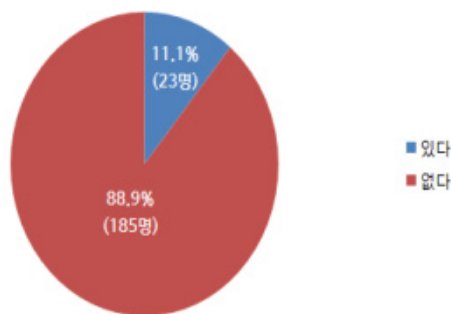


국내 근로자와의 마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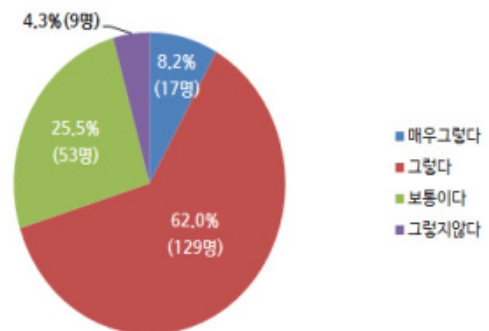
[그림 4-23] 사용상 애로사항

- 일곱째, 애사심 취약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47.1%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2.9%로 나타남

- 끝으로, 국내 근로자와의 마찰에 대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18.8%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81.3%로 나타남
- 불법취업자 고용의향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11.1%로 나타난 반면, '없다'라는 응답은 88.9%로 나타남
  - 불법취업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응답업체의 70.2%를 차지한 반면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9.8%로 나타남
  - 한편, 불법취업으로 야기되는 사회·경제적인 문제로는 각종 범죄문제에 대한 우려(법의 규제 부족 등),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문제(인권 문제 등), 국가나 지역 이미지의 훼손,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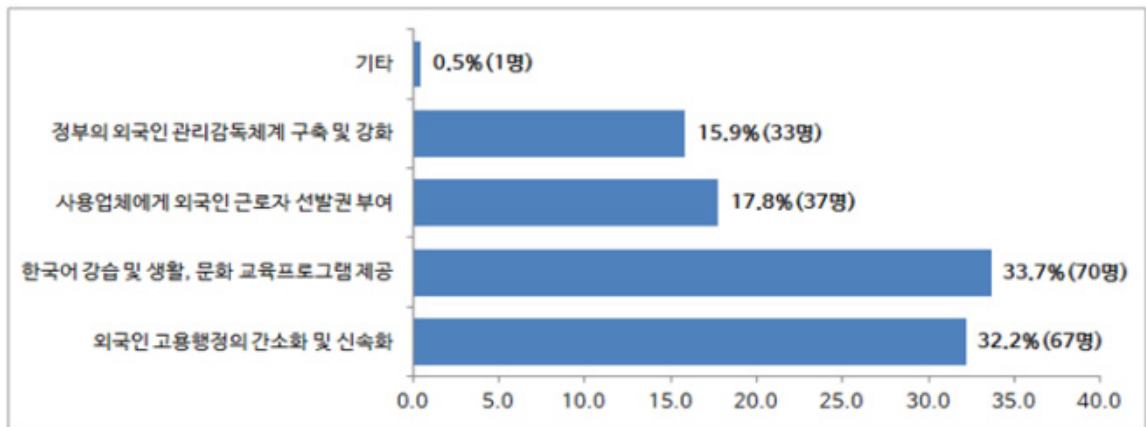


[그림 4-24] 불법취업자 고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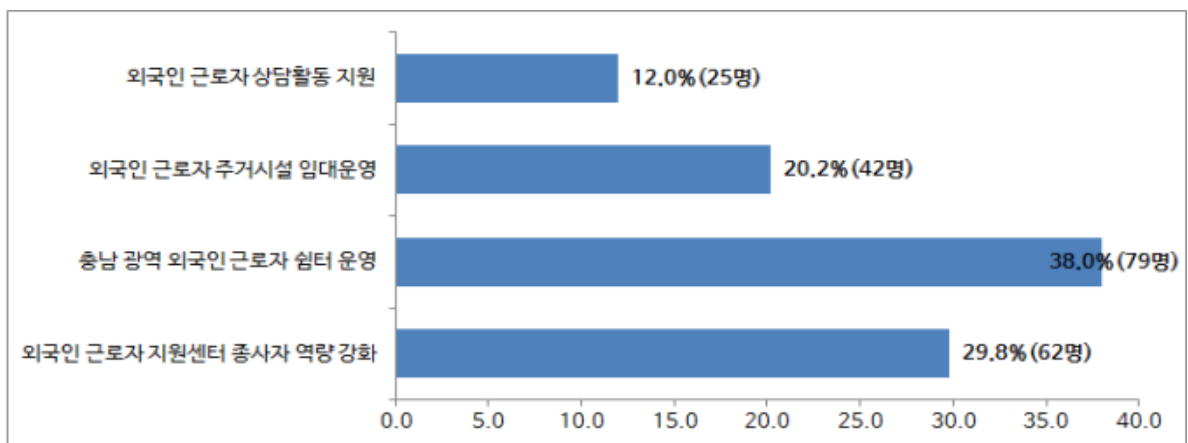
[그림 4-25] 불법취업의 사회·경제적 인식

- 불법취업자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근로자신분으로의 외국인력 도입 확대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4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관리감독강화(21.6%), 불법취업자 소개기관 처벌(19.7%), 사용업체 및 불법취업자 처벌강화(17.3%)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어 강습 및 생활, 문화,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 및 신속화(32.2%), 사용업체의 외국인 근로자선발권 부여(17.8%), 정부의 외국인 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강화(15.9%)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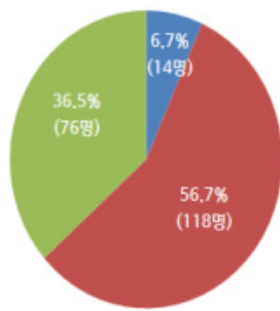
[그림 4-26] 현행 고용정책 개선사항

- 충청도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29.8%), 외국인 근로자 주거 시설 임대운영(20.2%), 외국인 근로자 상담활동지원(12.0%)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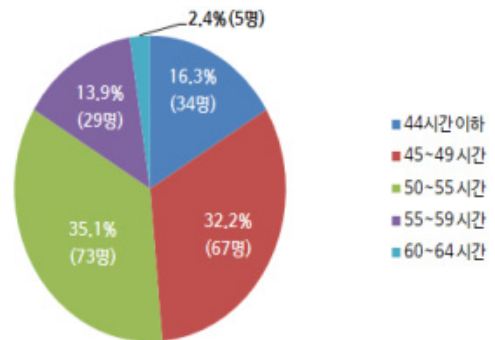


[그림 4-27] 충청도 고용정책 중요도

-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150~200만원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200만원 이상(36.5%), 100~150만원(6.7%)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당 평균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50시간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45~49시간(32.2%), 44시간 이하(16.3%), 55~59시간(13.9%), 60~64시간(2.4%)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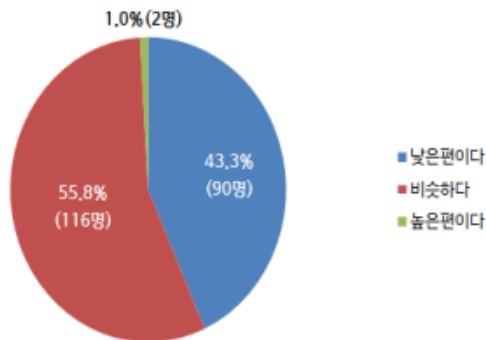


[그림 4-28] 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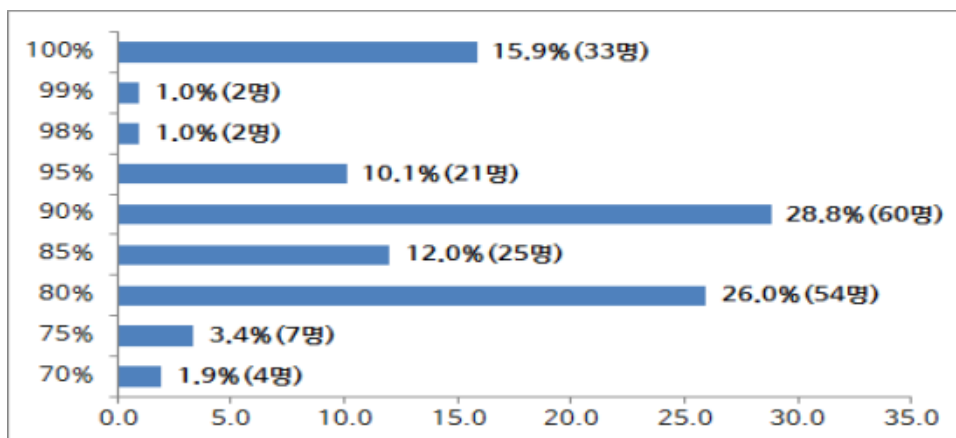
[그림 4-29] 주당 평균근로시간

- 숙박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한 외국인 근로자의 총 고용비용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낮은 편이다'(46.3%), '높은 편이다'(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0] 총 고용비용

- 끝으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90% 수준'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업체 대비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80%수준'(26.0%), '100%수준'(15.9%) 등의 순임



[그림 4-31]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 생산성

## 제4장.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 도출

### 1. 정책적 시사점

- 2015년 현재, 전국대비 충남의 외국인력 비중은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하며 제조업 집적지인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서북부권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 그러나 `13~`15년 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 증가율이 시도위(11.7%)보다는 군단위(14.1%)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남
- 체류자격별로는 일반 고용허가제[비전문취업 취업(E-9)]와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H-2)]가 취업 가능한 전체 등록외국인 대비 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고용허가제 사업장 외국인 평균고용 규모는 3.7명으로 전국 평균 3.3명을 상회하는 수준임
-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 포함)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순이며, 총 13개 국적(대륙별 및 기타로 집계된 경우, 국적을 알 수 없음)의 외국인력이 유입됨
- 외국인 고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조사와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만, 자체조사는 충남지역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반면, 외국인 고용조사는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을 대상으로 한 탓에 후자의 경우, 해석상의 주의가 요구됨
- 수요측면에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가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도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대부분은 국내인력의 구인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력의 총 고용비용이 내국인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단순히 저렴한 인건비 절감 보다는 구인란 그 자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임
- 한편, 응답업체 대부분이 현재 외국인력 고용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관련하여 현재, 충남도는 외국인 고용한도 20% 상향지역으로 분류되며, 업체들의 상기 채용계획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또한 도내 외국인력의 숙련도에 대해 전체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이 '낮다'라고 응답함에 따라 향후 고숙련 외국인력과 관련교육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외국인력의 숙련도는 대체로 낮으나 생산성은 내국인과 비교해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채용 만족도 역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남
- 한편, 평균임금은 150~200만원 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응답업체 대부분 사업장내 외국인력과 국내인력간의 마찰문제는 크지 않으나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각종 범죄발생, 인권침해, 그리고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불법취업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관리·감독 및 처벌보다는 합법적 근로자 신분으로의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 주된 채용경로로는 관할 고용센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직업소개소, 지인 등)은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현행, 고용정책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신속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남
- 또한 사용업체에게 외국인 근로자 선발권을 부여하는 정책수요도 상당함
- 한편, 충남 지역단위 고용정책 중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내 종사자 역량강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이에 대한 도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공급측면에서 2016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가 주는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외국인력의 종사업종 비중은 제조업이 가장 높으며, 대부분 기능·기계조작·조립 및 단순노무 관련 업무비중이 월등히 높음
- 근속기간과 고용계약기간은 모두 1~2년 미만이 가장 많으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향후에도 계속체류를 희망하고 있음

-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근로자 비중이 임시, 일용근로자에 비해 월등하며, 구직 경로는 공공직업알선기관 보다는 대중매체와 자체 인적네트워크(친척, 지인, 동료 등)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사업장의 규모는 대부분 50인 이하로 나타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적별로는 중국인(한국계 포함)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향후에도 계속체류를 희망하고 있음

## 2. 향후 과제

- 첫째, 국가차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과 관련한 지역단위 통계구축 필요
  - 실제로 외국인력과 관련한 이용 가능한 통계는 법무부, 행안부, 통계청 등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법무부와 행안부는 외국인의 출입국 파악이나 효율적 관리를 주 목적으로 관련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는 전국을 7개 광역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 다만, 2016년 국가단위 외국인 고용조사 당시 지자체로는 유이하게 파주시와 아산시만 통계청에 조사비용을 부담하여 자체 외국인 고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따라서 국가차원의 통계정비 외에도 충남도와 시군 역시 향후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단위 외국인 고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력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함
- 둘째, 미숙련 인력정책의 경우, 공급 주도적 제도(supply driven system)중심 이든 또는 수요 주도적 제도(demand driven system)중심이든 사례조사 대상 7개국 모두에서 취업업종과 쿼터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추세이며, 일부 국가는 내국민 고용을 일정부분 의무화하려는 경향을 보임

- 따라서 특히 취약계층의 노동공급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산업분야에 적정 미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셋째, 불법취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발생, 인권침해,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함
  - 불법취업문제에 대해서는 합법적 근로자 신분으로의 전환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높으나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차원에서 불법취업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력에 대한 현실 적합한 관리·감독체계 정비가 우선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이러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므로 내외국인간 사회갈등을 줄이고 통합하기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야함
- 넷째, 현행 정부주도의 고용정책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및 외국인 고용행정의 간소화와 신속화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남
  - 구체적으로 한국어 강습 및 생활·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확대운영과 더불어 외국인력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업종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능 및 기술교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함
- 다음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는 현재, 도내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중소기업체의 만성화된 인력 수급란은 내국인력의 중소기업체 기피가 주된 원인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함
  - 다시 말해, 도내 청년계층의 구직란과 외국인력의 내국인력 대체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의 존재가 명확치 않으므로 산업계가 당면한 구인란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에도 외국인력의 보완적 활용가치는 지속될 것임
  - 따라서 내국인을 도내 중소기업체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사업이나 임금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중소기업체를 발굴하고 관련 정보구득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충남도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2015년 현재, 충남도 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은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기타로 구별된 7,388명을 논외로 치더라도 총 13개국으로 다양함
  - 관련하여 외국인력의 상당수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인력지원센터 내 상담지원 인력의 경우, 다양한 국적의 피상담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력충원이 필요함



- 또한 도내 외국인력지원센터는 제조업이 집적된 서북부 지역 중 서산을 제외한 천안, 아산, 당진과 서천지역에 총 4개소가 기 개소하였거나 예정 중임
- 따라서 외국인 인력수요 정도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15개 시군 모두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외국인력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점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한편, 현재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은 '충남 광역 외국인 근로자 쉼터운영'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 종사자 역량강화'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3. 연구의 한계

-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 노동시장과 고용 등에 관련한 지역단위 통계구득이 용이치 않아 계량적 분석은 물론 그 실태조차 제대로 규명하는데 한계를 노정함
  - 실제로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외국인 노동시장 및 고용 등과 관련한 통계는 전국을 7개 광역단위로 구분하고 있어 충청도 단위는 물론 시군단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외국인 고용조사 역시 비용상의 한계로 공급측면의 고용실태조사는 2016년 외국인 고용조사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계를 노정함
  - 수요측면의 설문조사 역시 표본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제조업 중심의 고용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탓에 농·어촌 지역 및 서비스업종을 간과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가짐
- 상기한 제 문제로 인해 제시된 정책과제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향후 지역단위 통계구축 완비 및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적정규모의 고용실태조사를 전제로 지역차원의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량·정성적 분석이 필요함
  - 나아가 이를 기초로 지역차원의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함

## 【참고문헌】

- 강수돌(1996),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한국노동연구원.
- 울산발전연구원(2016), 울산 외국인력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 유길상 외(2004),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 외(2004),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이규용(200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05), 전문기술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07),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07),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11),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외(2015), 이민정책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2007), 외국인력정책 변화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2017), 경제사회적 편익제고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방향, 월간 노동리뷰 2017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박성재(2011), 외국인력 구용구조와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이민정책연구원(2014), 숙련기능 외국인력 활용방안 연구.
- 이상돈(2017),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 수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진화(2003), 중장기 외국인력 적정수요 전망(제조업 생산직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연구원(2008),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을 위한 수급모델 개발 및 고용허가제 제도개선.
- 최경수(2012), 외국인력 유입의 내국인에 대한 영향, 경제학연구 제61집 제3호.
- 최영기 외(2009),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경제학회(2009),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유치정책 방향.
- 한국노동연구원(1995), 외국인력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 한국노사관계학회(2011), 외국인력 근로실태 및 수요조사.
- 한국이민학회(2008), 전문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 한국이민학회(2012), 외국인력 도입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연구.
- 한성대학교(2010), 외국인력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 현대경제연구원(2015), 외국인력 도입 노동시장테스트 연구.